

## 가상자산 관련 총선 이후 정책 방향

### 1. 개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여당(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108석, 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오는 하반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여야 공통 공약

여야 공통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가장 주요하게 내세우는 공약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 발행을 단계적·조건부로 허용하고, 현행 소득세 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방안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주식거래에 준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역시 여야 공통적인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증권형 토큰(STO)의 법제화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3. 여야 가상자산 관련 세부 공약 비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법제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기본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발행 허용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상자산 발행 단계적 허용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 상장 허용
제도재정비 및 기반강화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증권거래위원회	통합 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과세 방안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시까지 투자소득 과세 연기	2025. 1. 1.부터 우선 과세하되 매매차익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제도를 도입
국회의원 등 규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가상자산 ETF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STO	토큰증권(STO) 관련 입법 연내 마무리	토큰증권(STO) 관련 입법 신속 추진

## 4. 시사점

### 1)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제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미 입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 2) 가상자산 발행의 단계적·조건부 허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계적·조건부로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통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상자산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상자산의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점에서는 결국 여야 간에 입장이 유사합니다.

### 3)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

양당 모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1) 투자자보호 및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국민의힘) 또는 통합감시시스템 설치(더불어민주당), (2)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마련, (3)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가상자산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하거나(국민의힘)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더불어민주당)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4)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5. 1. 1.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5. 1. 1.부터 우선 과세하되 매매차익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5천만 원)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제도(5년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2025. 1. 1.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 5)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최근 미국 SEC(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ETF 등의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앞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더불

어민주당은 유권해석을 재요청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 6)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토큰증권(STO)의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게 되어 신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당 공통 공약인 만큼 총선결과와 무관하게 제22대 국회는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